

기획 ▶ 5면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침해

기획 ▶ 6면

세상과 통하다, EBS 국제다큐영화제

오피니언 ▶ 7면

[칼럼] 방송 광고 규제 완화 정책의 문제점

“직접수신을 높여 공공 플랫폼 복원해야”

시민사회단체 “공시청 시설 유지 및 관리 법제화 필요” 주장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이용 행태조사 등의 조사 결과로 미뤄볼 때 직접 수신율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수치는 디지털 전환 이전인 2007년 21.4%, 2011년 14.7%보다 줄어든 것으로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디지털 전환 이후 직수율 하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대부분의 국가는 디지털 전환 이후 직접 수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직수율 하락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관련 업계를 비롯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과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급급한 정부가 화면의 100%를 가리는 상시 가상 종료를 수시로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은 순차 종료로 2012년 12월 31일보다 앞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ulti-Mode Service, MMS)를 도입해 시청자들의 지상파방송 시청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금이라도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청 시설(Master Antenna TV, MATV)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법제화 요구도 그 연장선이다.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방송의 공공 서비스 플랫폼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한석현 서울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공동주택 공시청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지원을 통해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고 유료방송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시청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신 설비만 제대로 갖추면 선명한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다.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DTV KOREA)는 “도심 아파트의 경우 송·중계소의 디지털 신호를 직접 수신하기도 하지만 건물에 부딪혀 굴절되는 반사파에 의해서도 수신이 가능하다”며 “과거 아날로그 전파의 경우 굴절파가 수신되면 TV 화면에 노이즈가 생겼지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서 선명하게 수신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송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방송 자체가 우수한 수신 성능을 갖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공시청 시설은 물론 단독이나 다세대 등에서도 안테나 같은 수신 설비만 있다면 고화질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안테나를 달거나 공시청 시설을 이용해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많다. 설사 안다고 해도 공시청 시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공시청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 공시청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관련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한 팀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직접수신가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료방송을 통한 TV 시청이 보편화됐고,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율이 90%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방송법 또는 주택법 상에 구체적인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관리 주체를 명기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이 여의치 않거나 시간이 걸릴 것에 대비해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별도 조항 신설 등으로 공시청 시설 복구와 관리,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및 주민 제공에 대한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도 한 팀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예전에는 아날로그 TV가 잘 안 나오니까 유료방송을 봤는데 이제는 돈을 내지 않고 TV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더 많은 것 같다”면서 “좋은 시설을 구축해도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다.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지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에 공시청 시설을 의무화하

고 있고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도 건물주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답한 뒤 “유료방송의 공시청 설비 무단 점유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분리 배선돼 있는 경우에도 공시청 시설이 훼손된 곳이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 점유로 봐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서 “물론 (유료방송에서) 마케팅을 했겠지만 공시청 설비도 주민 재산 중 하나고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과연 무단 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의 답변에 노 사무국장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나서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가구도 있다”며 “공시청 시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의무화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공시청 시설은 공공재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지만 공공재는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다. 공시청 설비도 이런 공공재의 속성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공시청 시설=공공재’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지상파방송은 누누이 말했듯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미디어 환경의 매체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히 누구나 무료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공시청 시설과 같은 수신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법·제도적 뒷받침을 확실히 해나갔으면 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통위, 종편 방발기금 면제 강행

정부의 ‘종편 감싸기’ 노골화...“매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종합편성채널이 올해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받았다. 종편의 오보와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해서만 유독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정부가 OBS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종편의 방발기금 납부 면제를 또 다시 결정하자 정부의 ‘종편 감싸기’ 본색이 다시 노골화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0.5%로 2016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야당 추천 위원들은 종편의 1% 방발기금 징수를 주

장했지만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종편은 출범 이후 4년째 방발기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방통위는 “최초 분담금 징수율은 1%를 적용했지만 적자 상태에 있는 사업자의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 징수율을 적용하고 1년 후부터 0.5% 징수율을 적용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 진흥 사업 및 문화 예술 진흥 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

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됐으며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 광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며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 광고 매출액, 방송 사업 관련 영업 이익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산정된다.

하지만 종편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한 ‘적자 상태에 있는 사업자’라는 전제도 종편과는 맞지 않는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PP의 총매출액은 32% 정도 성장했고, 방발기금 분담금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매출액 역시 3% 정도 증가했다. 성장세로만 따지면 지상파 방송사보다 나은 수준이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거대 미디어 그룹 부속 매체인 종편을 신생 매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거대 미디어 그룹의 영향을 받아 광고 영업도 급성장했는데 또다시 방발기금을 유예하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미래부가 IPTV의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0.5% 방발기금을 징수기로 한 것은 시장영향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시청점유율 등 종편의 영향력을 미루어볼 때 방발기금 면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와 종편의 또 특혜 ‘짜자깡’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종편은 지상파는 적자가 나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방발기금을 계속 유예받고 있고,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종편을 의무적으로 전

송하도록 한 의무전송 특혜, 지상파는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 허용이나 느슨한 광고 금지 품목 특혜, 종편이라는 말이 낮부끄러울 정도로 보도·토론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편성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유례가 없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종편을 바로 잡지 못하고 특혜나 엮어줄 바에야 방통위는 ‘종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OBS를 비롯해 적자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소규모 방송사들이 이제까지 방발기금을 내온 것은 방발기금이 광고 등 수입에 대한 준조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종편에 또 다시 방발기금을 면제해 준다면 종편 특혜를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방통위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결국 종편의 방발기금을 면제해줬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제24-2대 대의원대회 개최

24-1대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4-2대 사업 계획 · 회계연도 예산 승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8월 28일 오후 6시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4-2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정수 75명 중 54명(위원장 포함)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제24-1대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제24-2대 사업 계획 및 회계연도 예산 승인, 회칙 개정 승인 등을 처리했다.

박종인 연합회 사무처장의 성원 보고, 이후삼 연합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

된 대의원대회에서는 먼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연합회의 활동 내용과 주요 성과 등을 보고했다.

도기태 연합회 정책실장은 “이전 집행부에 이어 24대 연합회 역시 시청자 복지를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 및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5개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아쉽지만 그래도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 정책실장은 이어 “특히 24대에서는 가을 디지털 방송 콘퍼런스를 Kobeta Conference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KOC으로 바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방송 미디어 시장을 바라보고자 했으며, KOBA 콘퍼런스 세션 형식으로 실시되던 KOBA 미래 방송 포럼과 월드 포럼 역시 하나로 합쳐 월드 미디어 포럼이라는 독립적인 행사로 규모를 확대



했다”며 “앞으로도 미디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연합회 신규 회원 처리 규정 신설 및 정회원 승급에 대

한 세칙’을 신설해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일반회원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용어

공시청 설비 Master Antenna Television, MATV

공시청 설비란 공동주택에서 각 세 대별로 안테나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또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 수신 설비를 의미한다. 공시청 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송 시설로 안테나, 신호 증폭기,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며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의 수신 계통과는 분리된 설비다. 만약 공시청 설비가 없다면 공동주택 입주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며 안테나를 방송 신호를

보내주는 송신소 방향과 맞춰야 하는 번거로운 일을 해야만 한다. 2004년 말 법 개정으로 공시청장 설치된 공동 수신 설비를 의미한다. 공시청 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송 시설로 안테나, 신호 증폭기,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며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의 수신 계통과는 분리된 설비다. 만약 공시청 설비가 없다면 공동주택 입주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며 안테나를 방송 신호를

강민정 mjkang@kobeta.com

EBS 이사 후보에 ‘부적절 인사’ 대거 포함

EBS 노조 “누가 EBS 이사회를 불합인사 집합소로 만드는가” 성명서 발표

부적절 인사로 평가받았던 인사들이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되면서 EBS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을 비롯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기하 삼아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발족한 ‘공영언론이사회추천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 방송 EBS에 부적절 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 EBS 이사는 총 9명으로 EBS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현 이사의 임기는 9월 14일 만료된다. 앞서 방통위는 EBS 이사 후보자를 8월 4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48

명이 지원했다며 이들 중 3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EBS에서 장한 결사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가 EBS 이사 후보자로 선정한 37명 중에는 시민사회단체와 EBS 내부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위부는 8월 25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EBS 이사 지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징계 재확정

노조 “합리성 결여된 징계는 폭력일 뿐”...사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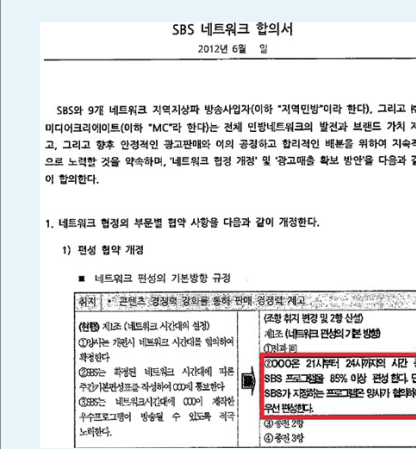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최근 복직한 이상호 MBC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거세다. MBC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즉각 재징계 무효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경남 단종 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2013년 1월 이 기자를 해고했다.

이후 이 기자는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2년 6개월 간 소송 끝에 7월 9일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득) 전원합의체는 “이 씨의 해고와 징계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며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 원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측과 이 기자의 갈등은 복직 뒤에도 이어졌다. MBC 사측은 8월 4일 복직한 이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 기

SBS-미디어크리에이트, 지역 민방 편성권 침해했다

최민희 의원 “SBS 형사처벌하고, 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 취소해야”



최 의원은 “밤 9시부터 12까지의 3시간 중 85%를 제외한 시간은 27분에 불과해 사실상 지역 민방의 로컬 프로그램은 편성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와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미디어렐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애초 허가 조건과 최근 이뤄진 재허가 조건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지역 민방에 대해 자 사별 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SBS와 SBS가 최대주주인 민영 미디어렐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 민영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본격 논의

‘지상파 UHD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 출범

정부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19일 지상파 UHD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해 산·연·관 공동으로 ‘지상파 UHD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TF)’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재우 미래부 제2차관과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마련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듣고 향후 TF에서 검토해야 할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앞으로 미래부와 방통위 담당 국장 등 실무자 중심으로 꾸려진 TF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키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제조업체, 연구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TF는 지상파 UHD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되고 정책 초안을 마련해 양 기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TF에서 마련한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상파 UHD 정책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UHD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TF 출범은 우리나라 방송 플랫폼의 미래이자 방송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전담반에서 정책 초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수확능력’의 EBS 방송 연계 정책을 폐지하고 수능방송 민간 개방으로 교육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며 “이런 인사들이 정년 1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이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간 EBS가 힘들게 쌓아올린 공익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버리고 자질 부족으로 얼룩진 이사회가 무너뜨려왔던”며 “명백한 결격 사유에 지적 미달인 사들을 공모하는 이렇듯 노골적 EBS 이사로 만들려고 하는 반면 방통위는 불법을 용인하고 획책하는 규제기관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연해 그 추진 경위와 인터뷰 지시 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특별감사 청구를 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고 지적한 뒤 “합리성을 결여한 징계는 그저 폭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8월 25일 보도자료를 내놓고 “회사의 이번 징계 조치는 2012년 대선 직전 허위의 글을 네 차례나 트위터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큰 피해를 입힌 이상호에 대해 대법원이 7월 9일 판결을 통해 징계 사유를 인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확정된 것”이라며 “회사는 이상호의 사규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 타 징계의 형명성, 그리고 무효로 판결된 해고자에 대한 재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 자료와 징계 사유, 논리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설명했다”고 반박해 이 기자에 대한 중계를 거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무 편성을 강요했고, 광고 매출을 전적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민방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지역 민방의 협의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허가를 받기 전인 2012년 6월부터 이뤄졌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는 지역 민방에 대한 광고 매출 최소보장율만 90%에서 92%로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와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미디어렐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애초 허가 조건과 최근 이뤄진 재허가 조건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지역 민방에 대해 자 사별 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이름을 붙인다? 찬반 ‘팽팽’

“제작 재원 마련 위해 필요” VS “시청권 훼손할 수 있어”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놓고 남산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가상 광고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과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갈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협찬 고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해 시청률이 낮아져 광고 판매가 어려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 방송 프로그램 내에는 협찬주명 등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 제목과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 시작 타이틀 및 종료 타이틀 고지 시 △해당 방송 프로그램

의 예고 시 △방송 프로그램 전에 편성되는 광고 시간의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노출하는 방송 프로그램 예고 자막 방송 시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의 제목에는 협찬주명 등의 고지를 금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선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제목 광고’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송 광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염성원 평택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의 예상과 달리 타이틀 스폰서십은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집중될 것이고, 타이틀 스폰서십이 도입되면 누구나 타이틀 스폰서십을 하려고 하지 뭐냐”는 광고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고 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총장 역시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 타이틀 스폰서십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광고주만 단연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 시작 타이틀 및 종료 타이틀 고지 시 △해당 방송 프로그램

“지상파 MMS 전면 허용해야”

우상호·송호창 의원 “MMS 도입 등 시청자 위한 로드맵 제시할 것”



2012년 12월 31일 완료된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시청자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ulti-Mode Service, MMS)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MMS는 하나의 채널 대역 내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EBS2 기반 서비스와 사보유비점과 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다만 서비스를 통해 본방송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유료방송 업계의 발달로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 EBS가 유일하게 EBS2를 시범 서비스하고 있지만 아직 본방송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한석현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8월 27일 열린 한국 방송의 공공 서비스 플랫폼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상파 MMS는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결정하면서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해 도입을 약속했던 것”이라며 “조속히 지상파 MMS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상파 MMS 전면 도입 요구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열린 시청자 관점에서 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토론회에서도 “신규 서비스

백선하 baek@kobeta.com

남북 대치 중 미래부 산하 임직원 골프 회동 논란

“정보통신공제조합·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임직원 8월 24일 골프 라운딩 즐겨”

북한의 포격 도발 후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던 8월 24일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현직 회장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현직 회장 및 두 기관 직원 등 16명은 8월 24일 오전 8시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에서 간담회를 겸한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조합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라운딩 이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들의 골프 라운딩 소식이 조현철과 협회원들에게 알려지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 경영진을 상대로 이날 골프 모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업계 신문인 <정보통신신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휴전선 인

자 복지단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방송 시장의 상황과 방송사의 입장에서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성진 지역MBC 전직차원장은 “지상파의 시청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역 지상파의 시청률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방송의 산업화 등이 우려된다면 프로그램 제작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방송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뒤 도입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월 31일 ‘방송 협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협찬의, 협찬에 의한, 협찬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 것”이라며 “협찬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8월 25일 방송 협한 고지 규칙 개정 관련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방통위가 행정 예고한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상업화를 가속화시킨다고 공격적으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청자 또는 방송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방송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협찬 고지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부터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협찬 고지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숙희 imaonearm@naver.com

법원 “출구조사 무단 사용한 JTBC, 12억 배상하라”

“JTBC의 행위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12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8월 21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상파 3사가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 원 가까운 돈을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출구조사 결과는 배방송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JTBC는 출구조사 결과와 창출 과정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으며 JTBC와 MMS를 전연 도입해도 이용자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는 점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JTBC의 행위가 언론계의 관행으로서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보다 먼저 공개한 것은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정당한 인용 보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 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의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28일 JTBC가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

강민정 mjkang@kobeta.com

NIA 연구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NIA가 발주한 과제를 특정 업체가 말로라도 돕고 18개사로부터 2억7천만 원의 뭇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NIPA 연구원들 역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NIPA가 발주한 시물인터넷(IoT)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과제를 특정 업체에 맡기고 15억4천만 원의 뭇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산하기관들의 골프 회동이 알려지자 미래부 산하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미래부는 지난해에도 산하기관 직원이 정부 사업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관리 및 감독 부실이 대에 당하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넷플릭스,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일본 진출 월 6,500원으로 9월 달부터 서비스 시작

미국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소프트뱅크와 업무 제휴를 맺으며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에 따라 9월 일본 진출에 이어 2016년 국내 방송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가 일본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월 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가입자들은 대리점과 소프트뱅크 웹사이트에서 넷플릭스에 가입할 수 있다. 아시아 최초로 일본에 진출하는 넷플릭스의 가격은 650~1,450엔 사이로 37지 요금을 선보인다.

이번 제휴로 넷플릭스는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

일본 시장에서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기존 소프트뱅크 소비자들에게 손쉽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콘텐츠 분야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이번 제휴를 통해 넷플릭스와 손잡고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0월 미국 최대 한류 드라마 전문 인터넷 업체인 '드라마퍼버'를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콘텐츠 수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플랫폼과 콘텐츠가 내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가 일본 진출을 위해 소프트뱅크

와 업무 제휴를 맺자 국내 이동통신 3사도 넷플릭스와의 협력을 염두에 둔 물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TV(IPTV) 유료 가입자가 1,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동통신 3사의 콘텐츠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의 Btv는 키즈 전용 TV 서비스인 'Btv 키즈존'을 시작 하면서 어린이와 유아용 콘텐츠들을 대거 확보해 나가고 있고, KTV의 올레tv는 지난 6월부터 초고화질(UHD) 채널인 '스카이UHD1(201번)'과 'GJ UXN(203번)' 채널을 선보이며 UHD 콘텐츠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미국 유료방송 채널 HBO와 업무 제휴를 맺어 '왕좌의 게임' 등

미국 드라마를 대거 선보이며 특화된 영역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의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의 업무 제휴는 시장 전반을 뒤쫓을만한 일"이라며 "이번 사업자가 파트나가 되면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 방송 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학계 전문가는 "우선 우리나라는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워낙 높아 지상파방송을 끼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넷플릭스가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 없이 유료방송과의 협력 또는 단독으로 진출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워낙 자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통했던 가격경쟁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활용하면 송출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사용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TRI는 해당 기술을 방송 분야 국제표준기구인 ATSC에 상정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월 ATSC 3.0 국제표준의 기반(baseline)기술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LDM 기술을 포함한 ATSC 3.0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될 경우 ETRI는 핵심 표준특허 확보를 통한 기술로 창출과 초기 ATSC 3.0 방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남호 ETRI 방송시스템연구부 부장은 "연구원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향후 차세대 유럽 방송규격(DVB)에도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세계 방송 시장에서의 기술 영향력도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기술은 미래장조각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IITP) 방송통신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사업인 '융합형 실감방송 서비스 및 전송 기술 개발'의 세부 과제인 '차세대 지상파방송 전송 기술 개발'의 자원을 통해 개발됐다.

이진범 inb1001@kobeta.com

ETRI, 차세대 지상파 방송시스템기술 최초 시연 성공 “한 채널로 4K UHD와 이동 HD 방송 동시 제공”

국내 연구진이 하나의 방송 채널로 초고화질(UHD) 방송과 이동 고화질(HD) 방송을 동시 송수신할 수 있는 계층분할다중화(LDM) 기술의 필드테스트를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하나의 송신기로 하나의 방송 채널에서 4K UHD와 이동 HD 방송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LDM 기반 차세대 지상파방송 시스템을 ㈜클래버모직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제주 테크노파크와 함께 필드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ETRI는 8월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테크노파크에

MBC, 360도 VR 액션 드라마 선보인다 ‘빛나거나 미치거나 VR’ 8월 25일 예고편 공개…본방송 9월 5일

MBC가 세계 최초로 360도 가상현실(VR) 액션 드라마를 선보인다. MBC는 8월 25일 지난 4월 종영한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를 모티브로 제작한 ‘빛나거나 미치거나 VR’ 예고편을 MBC VR에 플래케이션, 유튜브, 무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영했다. 360도 VR 액션 드라마는 가상현실이라는 VR 특 그대로 시청자가 마치 드라마 속 현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촬영하고 구현한 기술을 의미한다.

10세기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화려한 검술 액션을 선보이는 ‘빛나거나 미치거나 VR’은 VR 콘텐츠의 가장 큰 기술적 장벽으로 여겨졌던 초근접 촬영에 성공해 드라마 속 액션 장면을 시청자들이 현장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동감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VR 카메라 위치를 통해 화려한 영상을 만들어 몰입감을 극대화시켰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는 평을 받고 있다.

6월 초 기획을 시작으로 약 석 달의 제작기간이 소요된 ‘빛나거나 미치거나 VR’은 MBC 사극 제작의 산실인 용인 대강궁 파크에서 촬영했으며 1차 예고에 이은 2차 예고에서는 용인 대강궁 파크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심으로 두 번째 트레일러가 공개될 예정이다. 본 방송은 9월 5일 MBC WORLD 그랜드 오픈에서 최초 공개된다.

MBC와 긴밀하게 협력한 김운정 무비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드라마를 주어진 앵글로만 단순히 시청하는 콘텐츠에서 VR로 체험하는 콘텐츠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액션 촬영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와 MOU 체결 방송통신 분야 인력 교류 확대 등 양국 간 협력 방안 논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월 28일 발간 슈텐 바슈크(Balgansuren Batsukh)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CRC) 위원장과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서 몽골 국영방송(MNB) 및 불룸버그TV 몽골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몽골의 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인터뷰했다.

최 위원장은 CRC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양 기관 간 방송통신 인력의 교육 훈련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한국의 앞선 경험과 애로사항 극복 사례 등을 함께 나누 몽골의 방송통신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RC 위원장은 “정보통신 분야 및 모든 미디어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을 모범케이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전숙희 imaonearm@naver.com

방송기술교육원

[UHDTV 제작실무 및 포스트 프로덕션] 교육 안내

· 교육목적

UHDTV 및 차세대 방송의 개요 및 기술 동향 파악/UHD 실무 제작사례의 이해를 통한 실무적응능력 강화

UHD 후반작업 워크플로우 연구 및 색보정, 마스터링 방법 공유/4K 드론을 이용한 제작 실무의 이해

· 교육기간 2015.09.15(화) ~ 09.18(금), 총 4일

· 교육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 15명

· 교육장소 KBS수원센터 인재개발원 내 방송기술교육원 102호 강의실

· 접수방법 8월 31일(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c.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 교육비 무료(중상을 제외한 기타 숙식비 및 교육상 출장비 자체부담)

· 담당자 강민정 과장, 민서진 연구원

· 문의처 사무실 02-3219-5640-1 / 교육청 031-219-8261-2

· 이메일 bea@kobeta.com

일정	시간	강사	교육 내용
1일차 9월 15일 (화)	13:40~14:00 (20분)	방송기술교육원	교육사연, 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14:00~16:00 (2시간)	최원근 KBS기술팀장	UHD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16:00~18:00 (2시간)	오종민 KBS기술팀장/영상팀 VFX Supervisor	UHD 실무 제작사례
2일차 9월 16일 (수)	10:00~12:00 (2시간)	이동운 KBS기술팀장/영상팀	UHDTV 방송기술 및 장비 동향
	12:00~13:00 (1시간)		중식
	13:00~18:00 (5시간)	조인준 KBS기술팀장/영상팀	UHDTV 제작 워크플로우
3일차 9월 17일 (목)	10:00~12:00 (2시간)	나동진 KBS기술팀장/영상팀	UHD 제작사례 연구
	12:00~13:00 (1시간)		중식
	13:00~15:00 (2시간)	최원근 KBS기술팀장/영상팀	UHDTV 제작실무 및 포스트 프로덕션
	15:00~18:00 (3시간)	남기환 SBS기술팀장/영상팀	4K 드론을 이용한 제작 실무 교육
	10:00~12:00 (2시간)	한종영 KBS기술팀장/영상팀	UHD 촬영
4일차 9월 18일 (금)	12:00~13:00 (1시간)		중식
	13:00~16:00 (3시간)	김승준 KBS기술팀장/영상팀	UHD 콘텐츠 UHDTV 포맷변환(색보정)
	16:00~17:00 (1시간)	강민정 Planning	UHD & 네트워킹 트리트먼트 및 마스터링 미래 기술 전략
		방송기술교육원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방송기술교육원

[DTV 송신시스템(2차)] 교육 안내

• 교육목적

NEC DTV 송신기 Exciter/TRPA 및 송신인쇄 이해/각 송신기 기종별 맞춤교육 및 현장 유지보수/정비사례 공유/FM 송신기 운용 및 측정과 기술동향 이해/관악산송신소 견학 및 DVB 무선국 검사 실습 교육

• **교육기간** 2015.09.21(월) ~ 09.24(목), 총 4일 • **교육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 15명

• **교육장소** KBS수원센터 인재개발원 내 방송기술교육원 102호 강의실 및 KBS 관악산송신소

※ 1차 교육집합 장소 : 4호선 과천역 7번 출구, 오전 9시 40분까지 집결

• **접수방법** 8월 31(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c.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 **교육비** 무료(중상을 제외한 기타 숙식비 및 교육상 출장비 자체부담)

• **담당자** 강민정 과장, 민서진 연구원 • **문의처** 사무실 02-3219-5640-1 / 교육청 031-219-8261-2

• **이메일** bea@kobeta.com

일정	시간	강사	교육 내용
1일차 9월 21일 (월) (장소 : 관악산송신소)	10:30~11:00 (30분)	이하주 KBS기술팀장	• 관악산송신소 현황소개
	11:00~12:00 (1시간)	고원성 KBS기술팀장	• 전력설비 운용 일반
	12:00~13:00 (1시간)		중식
2일차 9월 22일 (화)	13:00~14:30 (1시간30분)	김기환 KBS기술팀장/영상팀	• 방송소송 및 사전 알선 / 방송 송출 송신 시스템 일반
	14:30~12:00 (2시간)	오성원 KBS기술팀장/영상팀	• DTV 송신인쇄의 이해
	12:00~13:00 (1시간)		중식
3일차 9월 23일 (수)	13:00~15:00 (2시간)	구자훈 KBS기술팀장/영상팀	• NEC DTV 송신기 Exciter / TRPA (I)
	15:00~18:00 (3시간)	서정원 KBS기술팀장/영상팀	• NEC DTV 송신기 Exciter / TRPA (2)
	09:00~12:00 (3시간)	남상수 KBS기술팀장/영상팀	• TOSHIBA DTV 송신기 운용
4일차 9월 24일 (목)	12:00~13:00 (1시간)		중식
	13:00~15:30 (2시간30분)	전성삼 KBS기술팀장/영상팀	• 송출 운용 Part.1
	15:30~18:00	김종영 KBS기술팀장/영상팀	• R&S DTV/DVB 송신기 운용
5일차 9월 25일 (금)	09:00~12:00 (3시간)	권효승 KBS기술팀장/영상팀	• HARRIS DTV 송신기 운용
	12:00~13:00 (1시간)		중식
	13:00~16:00 (3시간)	임성현 KBS기술팀장/영상팀	• FM 송신기 운용 및 측정
6일차 9월 26일 (토)	16:00~18:00 (3시간)	박성근 KBS기술팀장	• 측정운용 Part.1 / 기술동향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침해 - TVPad 사례를 중심으로 -

이진관
KBS 지식재산권부 팀장

인터넷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방송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점으로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온라인 유통을 가능케 해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웹하드에 이어 최근에는 토렌트(Bit torrent)가 콘텐츠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이 검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TVPad’라고 하는 불법 기기가 세계적으로 유통되면서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합법 시장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TVPad 사례를 중심으로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VPad 불법 유통 현황 및 발생 피해

TVPad는 중국에서 제조한 일종의 인터넷TV 셋톱박스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TVPad를 구매한 후 TV나 모니터 등 영상출력장치에 인터넷을 접속하면 특정 서버를 거쳐 세계 각국 방송 콘텐츠 100여 개 이상의 채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다수의 콘텐츠도 VOD 형태로 시청할 수 있다. TVPad가 단기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한번 기기를 구매하면만 하면 평생 시청료 한 푼 안 내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1. TVPad 구성 및 작동 원리

TVPad의 구성은 간단해서 HDMI 케이블을 통해 기기 본체와 텔레비전을 연결해 방송 신호를 출력하고 그밖에 AV 전원케이블과 리모컨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작동 방식은 기존의 IPTV 셋톱박스와의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톱박스 하나로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TVPad는 송신된 신호를 튜너를 통해 수신하고 각각의 신호를 압축 해제, 분리해 각 사용자에게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기기 본체와 내장된 HDMI 케이블을 TV와 연결하고 LAN 또는 무선인터넷으로 연결하게 되면, 기기 고유의 메뉴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이 TV 화면에 표시된다. 이후 각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해 실행하면 해당 영상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더 자세히해 동작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 기기를 인증할 수 있는 서버 즉, 기기 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기기를 관리하는 서버를 거치게 되며, 이 인증서버에서 연결된 기기의 해당 지역 IP가 확인되면 방송 콘텐츠 서버로 연결돼 스트리밍 형식으로 콘텐츠를 전송한다. 이 방송 콘텐츠 서버에는 각각의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또는 VOD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가 업로드되고, 기기 구매자들이 TVPad 내에 Solive와 같은 한국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인증서버는 해당 기기를 인증한 후 이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방송 콘텐츠 서버를 연결해 불법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2. TVPad 불법 유통 현황과 발생 피해

TVPad는 중국에서 연간 20만 개 이상이 생산돼 전 세계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TVPad 제조 및 판매사가 인터넷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간 판매량이 2만 개 이상이고 전 세계 27개 국가에 72개 이상의 대리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대당 판매가격이 300~40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제조사의 연간 판매 수입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톱박스 하나만 한국 TV 방송 실시간 무료 시청! TVPad가 전면에 내세운 광고 문구다. 하루에도 수백 편의 콘텐츠가 TVPad로 유통되는 데 한 편의 방송 콘텐츠가 수개월의 노력을 거쳐 찍히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제작에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방송사들과 아무런 계약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해적방송용 불법 기기가 일한 피해액은 상상

하기 어려울 정도다. 공짜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 유통 전략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TVPad 불법 유통이 계속된다면 합법적인 해외 콘텐츠 유통 시장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TVPad 단속 및 대응 실태



TVPad가 국내외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자 방송사들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해외에서는 KBS World 채널과 재외공관을 통해 교민들에게 한국 채널 불법수신 관행과 저작권 침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TVPad와 같은 셋톱박스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하기도 하고, 교민신문에도 불법 시청 방법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근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TVPad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한류 콘텐츠 제값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자 결국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내에서 방송 3사는 소송을 통해 올해 지상파 방송사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 생성·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TVPad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현재 가처분 소송 이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G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들도 TVPad 판매를 이미 중단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한 소송도 최근 방송사들이 승소해 TVPad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기기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TVPad 측에서 자신들의 사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가장 많이 내세웠던 Aereo 사건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판결하자, TVPad 측의 대응 논리도 이미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에 방송사들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였다. 올해 들어서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DishNet, 중국 CCTV, CICC(중국 국제통신공사, TVB USA가 공동으로 TVPad 홍콩 분사와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방송사들 사이에서 TVPad가 불법 콘텐츠의 유통 창구라는 인식이 퍼져 나가고 있어 해외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문제점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집행해왔다. 2012년 웹하드 등특제 시행과 토렌트 불법업체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했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OSP업체들에게 불법 콘텐츠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게시판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시청명령제도도 도입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저작권 보호 노력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과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도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나 영화,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가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 남미나 유럽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비해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불법 복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증거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보다 다양한 형태로 한류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TVPad의 경우에는 기기가 유통 되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제조·판매 거점인 중국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TVPad의 제조와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아직까지는 중국 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방송사들의 힘만으로 권리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응 방안

방송 콘텐츠 시장의 추세는 이미 온라인을 통한 시청으로 바뀌고 있고, 이는 우리 콘텐츠의 저변을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TVPad, MaigeTV, TVzoa, KOVI TV 등과 같은 유사 셋톱박스형 불법 수신 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경우나 중에는 한류 콘텐츠의 합법 유통 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전 세계 교민 사회의 한국 콘텐츠 시청 패턴 역시 비디오 소매점에서 방송으로, 그리고 현재는 온라인으로 변화 중이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 기반 TV(OTT)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불법 판결과 당국의 단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점을 고려하면, 해외에서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TVPad와 같은 서비스가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TVPad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방송 서비스 제공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시간, 장소 및 단말기 제한을 무력화할 또 다른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 간 저작권 침해 분쟁도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콘텐츠 저작권자들이 불법 콘텐츠와 합쳐온 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법률적 환경을 미리 조성하거나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방송협회 개간지 '방송문화 2015년 여름호'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과 통하다, EBS 국제다큐영화제

정경희 (주마음에드느영화사 기획실)

2015년 한국 영화계 최대 화제는, 올해 첫 천 만 관객을 돌파한 <국제시장>도, <암살>이나 <베테랑>도 아니다. 그 주인공은 어느 노부부의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다. 대작들이 즐비한 극장에서 제작비 1억 2천만 원의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가 480만 관객과 만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 영화는 5년 전 296만 명의 관객을 모은 <워낭소리>를 연상시킨다. 두 영화 모두 다큐멘터리로서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뒀다. 일반 상업 영화(극영화)와 비교했을 때, P&A(Print&Advertisement:광고·홍보) 비용을 거의 쓰지 않고 입소문만으로 본 승부다. 즉, 관객들이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찾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다음 흥행까지 5년이나 걸렸을까?

안타깝게도 다큐멘터리는 극장에서 접하기 쉽지 않다. 1990년대엔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시리즈 정도 밖에 없었다. <워낭소리> 이후 <송환>, <우리 학교>, <올지 마, 토크> 등이 일한 성과를 거뒀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 극영화에 비해 원도우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영화계 가짓수가 100이 넘어가지만 그 중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단 3개뿐이다. 평화, 소통, 생명을 주제로 한 EMZ 국제다큐영화제와 실험, 진보, 대화의 인디다큐페스티벌,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대중화를 위해 만들어진 EBS 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가 있다. 다큐에 허기진 관객들로 인해 이미 수많은 마니아를 확보한 EIDF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EIDF는 2004년 8월, '변혁의 아시아'라는 주제로 출발해 올해 12회를 맞았다. 지상파 TV채널이 일주일 내내 정규 프로그램 대신 다큐멘터리로만 방송 시간을 채운다는 파격적인 시도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 EIDF는 어느덧 국내 시청자뿐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영화제로 성장했다.

EIDF의 올해 캐치프레이즈는 "세상과 통하다 Connecting with the World"이다. 나날이 파편화 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차 개인의 삶과 타인의 삶,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잃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 곳곳을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만큼이나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외되고 고립된 개인의 삶을 들여선 다양한 삶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를 꿈 꿀 수 있다. "세상과 통하다"라는 EIDF의 슬로건은 무너져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고 다양한 생각이 존중 받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상영작품들이 보여준 세상에 대한 관점은 참으로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경쟁 부문에 해당하는 '페스티벌 초이스'에서 화제가 됐던 두 작품, <특목>과 <침팬지 콤플렉스>가 세상에 던지는 물음표는 특별하다.

이집트에선 '특목'으로 불리는 삼륜차가 서민의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딱딱한 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택시가 다닐 수 없는 골목길을 자유자재로 달린다. 그러나 어디나 갈 수 있는 특목은 어디서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됐다. 법규를 무시한 채 도시를 휘젓고 다니면서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한다. 2005년 동남아에서 처음 들어온 특목은 차도 오토바이도 아닌 불법 제조물 취급을 받는다. 영업행위도 할 수 없지만, 실업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명분으로 정부가 눈감아 주면서 도시를 점



Movie: Tucan Samir - Do P. Henry Fakhr - Sound Designer: Abd El Rahman Mahmoud
www.tuk-tukfilm.com

명했다. 먼하가 따로 필요 없다 보니, 열 살 남짓 소년들까지 생계를 위해 특목을 몬다. 영화 <특목>은 바로 이 특목을 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10대 소년들의 일상을 담아냈다.

영화는 번잡한 이집트 시내를 부감(높은 위치에서 파사체를 내려다보며 촬영)으로 스케치하며 시작한다. 햇빛 가득한 거리가 담긴 화면을 가로지르며, 압달라와 사룬, 그리고 비카는 자신들의 특목을 태운 손님을 찾아 달린다. 이 소년들은 수업은커녕 운전면허도 없을 정도로 어리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뉘었다.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해 100파운드(1만 5천원)을 벌며, 그 중의 절반은 특목을 살 때 빌린 대출이자를 내는데 쓴다. 일지리를 빼앗기고 취업도 힘든 부모들은 마약과 폭력으로 거리를 헤매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낫다고 변명한다. 그 순간, 소년이 말한다. "제 미래는 보장이 안 되죠."

이집트의 연일되는 시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은 모두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특히 어린 소년들에게는 더욱 가혹하다. 학교에 가면 돈을 내야 되지만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와야 했다. 그렇게 거세당한 어린 소년들의 미래는 이집트 거리 곳곳을 부유한다. 영화의 앨버틴 사운



침팬지 콤플렉스
The Chimpanzee Complex
마크 슈미트
Marc Schmidt

드(ambient sound:대사, 음악, 특수 음향 효과 등과 같이 작품에 쓰인 소리가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나는 모든 배경 소리)는 자동차 경적소리로 가득하다. 화사하던 이집트의 거리에서 시작한 영화의 시선은 점차 흉폭하고 위험한 거리까지 이른다. 그곳이 소년들의 터전이다.

<특목>의 표현과 형식은 새롭지 않다. 다만 끊임없이 아이들과 대화한다. 답답하지만 직설적이기에 대담하다. 소년들을 쫓아가는 카메라가 담고자 한 것이 소년들의 고된 일상이라는 팔로 안에 숨은 소년들의 미래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경찰과 폭도들, 그리고 택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소년들은 노래, 담배, 게임 등 잠깐의 즐거움을 찾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하루하루를 견딘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날이 많은 소년들은 잃어버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빨리 어른들의 세계로 쫓겨나, 어른처럼 말하고 사고하는 소년들의 모습이 가슴 저민다. 경적이 끊이지 않는 거리 위에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소년들을 통해, 다르지만 비슷한 이유로 거리 위에 서있을 수많은 어린 존재들이 짊어질 미래를 떠올렸다.

영화 <침팬지 콤플렉스>는 네덜란드 동물 구조 센터를 배경으로 한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침팬

지에 재활 치료를 해주는 곳이다. 이 침팬지들은 일반 가정이나 실험실, 서커스단에서 사람 손에 길러졌기 때문에 센터에서 낯선 처음으로 다른 침팬지와 만나게 된다. <침팬지 콤플렉스>는 심리적 문제가 있는 침팬지가 이를 극복하고 동족과 생활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물이 동물답게 사는 방법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가르치는 과정은 역설적이다.

영화의 표문을 여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침팬지와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네덜란드 구조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다. 주인공인 침팬지 모조는 40년 동안 고립된 인간 손에 자랐기 때문에 다른 침팬지를 만나면 충격을 받는다. 거기다 매일 포도주와 맥주를 먹인 탓에 알콜 중독과 우울증 증세까지 보인다. 모조가 사람처럼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며 스카게티를 먹고 코카콜라를 마시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하다.

전문가들은 돌려앉아 침팬지가 침팬지다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간과 영장류 사이의 모호한 관계가 드러난다.

한 전문가는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침팬지가 인간과 다양한 교류를 하더라도 결국 침팬지는 침팬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동물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하다. 주체가 인간일 때, 인간의 관점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종을 이해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모조의 치료가 실패로 끝났을 때, 안락사가 대두된다. 사회적 동물인 침팬지가 매일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사람처럼' 침팬지도 고립된 채로 살아가선 안 된다고 말한다. '사람처럼'이라는 이유가 <침팬지 콤플렉스>를 관통하는 순간이다.

영화의 시퀀스(sequence:특정 상황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묘사하는 영상 단락 구분) 중간마다 클로즈업된 침팬지의 표피가 등장한다. 그리고 숨소리가 들린다.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법하는 가장 흔한 잘못일 것이다. 영화 말미, 우리 안의 카메라를 쥐고 흔들던 침팬지가 카메라를 우리 밖 인간을 향해 돌렸을 때, 창살 밖 인간의 모습이 섬뜩하게 보인다.

"영화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에 대해 물으면 말끝이 흐려진다. EBS 국제다큐영화제는 우물 안 한국 다큐영화계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제12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24-30 August 2015

방송 광고 규제 완화 정책의 문제점

칼럼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대 광고 매출액을 기록한 이래 지상파방송의 광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약 2조에 이르렀다. 반면에 지상파방송의 제작비는 2002년 1조 1백억 원에서 2013년 1조 2백억 원으로 유지되거나 다소 증가한 모양새다. 광고 매출의 축소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경직된 규제, 불필요한 규제도 한몫을 했다고 평가된다. 그래서 최근의 정부와 정책기관은 광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물론 사업자들도 규제 완화를 원한다.

“사업자들은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해 수익을 확보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불필요한 광고 규제는 폐지나 축소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차별적인 규제 역시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규제 완화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도 고찰해야 한다. 규제 완화 추세이다 보니, 너무 무차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생각해보야 한다는 의미다. 한번 시행된 규제 완화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량제, 간접광고, 가상광고, 중간광고, 협찬고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분야에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방송 광고 정책들이 시청자나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규제 완화의 경우, 시청자들보다는 사업자 입장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광고를 규제하

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방송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목적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까지 포함한 방송 광고 정책의 목적이다. 즉, 규제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시청자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의 사례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정책기관은 시청자 입장,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사업자들과 눈치 보기식 광고 제도 개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을 확보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아야 하는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내용을 보지 않을 시청자들의 권리는 간과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책기관은 이에 순응하는 모습이다.

한편, 정책기관은 규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앞서 치밀한 준비와 이를 통한 실험적 접근도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규제나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 정책당국의 태도는 졸속이거나 일방적인 모습을 종종 보인다. 이번 방통위의 규칙 개정안도 그렇다. 가상광고의 경우, 광고 노출을 위한 규정에 판단하기 불가능한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도 그렇고,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도 개정 이유로 밝힌 '방송법 시행령이 협찬고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7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총량제, 간접광고, 가상광고 확대에 대한 개정이 주요 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연구와 자세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도 개선 결과로 인한 파장과 효과에 대해서 미리 연구해 예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된 결과와 다양한 방안 등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용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의 구할 수 있고, 제도 개선안이 있을 때마다 찬반으로 갈리는 갈등 상황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정부의 종편 사랑은 언제까지 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올린 해 유예기로 결정했다. 최근 의결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내년부터 0.5%의 방발기금을 내게 된다. 출범 당시 갓난아기에 빔해 '겉음마 단 계까지는 돌봐줘야 한다'했던 방통위가 겉음마를 넘어 뛰어다니는 종편을 거아지도 갓난아기 취급한다는 비아냥이 있을 만큼 방통위의 종편 사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발기금은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기금으로 주요 방송 사업자로부터 징수해 방송 발전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 2000년 방송법에 의해 설치됐다.

문제는 2011년에 출범한 종편이 그동안 케이블·위성 의무 재전송, 광고 직접 영업, 중간광고,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편성 특혜, 심의 특혜, 서비스 권역과 황금채널 등 수한 혜택을 받고도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해도 방발기금 유예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래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조차 "종편만 유예하는 것은 시행령 위반"이라며 "종편이 방발기금에서 수십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총 9.7억 밖에 안 되는 돈을 안 낸다는 건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과

여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특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종편의 방발기금 부과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던 방통위원장은 어느 순간 돌변해 "다른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에도 적자가 있었을 경우 6년까지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종편에 유별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편 논란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또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에도 작년 방송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반영해 징수할 예정"이라며 종편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OBS 경인TV만 봐도 종편 특혜가 분명하다. 종편 적자론을 내세워 각종 특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방통위가 자체 제작으로 지역 방송의 모범적 모델을 선도해온 OBS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 잠식에 갇힌 OBS가 7천만 원을 내는 상황에서 거대 미디어 그룹인 종편이 방발기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기 않은가.

결과적으로 이번 종편 방발기금 유예 결정으로 방통위가 운영되고 있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방송이나 유선방송 사업자 등의 광고 매출액에 따라 징수하는' 방발기금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힘에 휘둘리고 있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1,000호 5월 20일			
발행인 이후삼	편집주간 이성의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편집위원 백낙운, 이승호, 김명권, 최관용,	나경록	전화 02-3219-5637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희, 강민정, 민서진, 전수희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기획실 강동균	홈페이지 www.kobeta.com		
인쇄인 성전&화성프린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가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 kobeta@naver.com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터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KOBASHOW 2016



26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6.05.24-27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이앤엑스·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서울특별시·KBS·MBC·SBS·EBS·OBS·한국음향학회·한국음향예술인협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아리랑국제방송·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